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特色과 問題點

—특히 北韓刑法總論의 犯罪論을 中心으로—

文 正 珉

目 次

- I. 序
- II. 北韓刑法의 制定 및 立法趣旨
- III. 北韓刑法의 法源과 構成內容
- IV. 北韓刑法의 基本原則
- V.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犯罪論
- VI. 結 語

I. 序

北韓刑法은 그 施行에 있어 30年の 긴 歷史를 지냈음에도 不拘하고 外部世界와 斷絶되어 孤立된 하나의 密閉社會를 形成한 理由로 그 性格과 內容이 西方世界는 물론 우리 韓國에 있어서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南北分斷이라는 歷史的 現實에 비추어 北韓의 社會体制의 本質 및 構造에 대한 体系的인 把握과 民族의 念願인 南北統一의 課業에 對備하기 위하여, 統一後 새로운 法을 制定하기 위하여, 또 將次 收復後 北韓에 臨時로 施行하여야 할 臨時措置法 등 刑罰法令의 制定에 對備하기 위하여서도 北韓刑法에 관한 研究는 必要하며, 北韓刑法은 北韓社會의 秩序를 지키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므로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秩序維持의 方法을 알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그 秩序維持의 武器라 할 수 있는 刑法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은 다른 어느 社會主義와도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完全히 統制된 獨裁主義의 体制를 構築하여 獨裁者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特色과 問題點>

에 대한 唯一思想이라는 絕對性만이 存在하고 있으며, 모든 實權은 黨에서 掌握하고 또 黨의 指令에 의하여 運營되므로 法令은 마치 黨을 運營하는데 必要한 道具나 武器로서의 性格을 갖 일 뿐이다.¹⁾ 이러한 北韓의 權力構造의 特殊性에 비추어 制度上으로는 法官이 黨에 隸屬되어 있어 司法權의 獨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黨의 命에 의하여 刑事節次가 恣意로 變更되고, 또 刑法에 있어서는 遡及效가 認定되며 (北韓刑法 第17條, 同法 第60條) 類推解釋이 許容되어 (北韓刑法 第19條) 近代 法治國家의 基本原則이라 할 수 있는 罪刑法定主義가 없다. 따라서 現代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刑法에 比하여 犯罪에 대한 刑罰이 지나치게 苛酷하고, 刑法에 있어서의 保障의 機能이 全然 考慮視되고 있지 않으며, 豫備와 未遂를 既遂와 同一하게 處罰하고 (北韓刑法 第20條), 또 教唆와 幫助를 正犯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하는 (北韓刑法 第22條) 등의 落後된 北韓刑法의 特色과 그에 따른 問題點들을 叙述하고자 한다.

Ⅱ. 北韓刑法의 制定 및 立法趣旨

1. 北韓刑法의 制定

北韓이 刑法典을 制定하게 된 그 經緯에 관하여는 반드시 明白하지는 않으나 1947年 11月 18日에 北韓의 憲法을 起草하기 위한 委員會가 組織되었다²⁾고 하며 刑法草案은 1950年 3月 3日 第5次 最高人民委員會의 常任委員會에서 採擇·公布되어 同年 4月 1日부터 施行 되었다.³⁾ 따라서 北韓刑法은 그 審議부터 完成되기까지 대체로 2年이라는 短期間에 制定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短期間에 刑法典을 制定하게 된 理由는 政治的인 面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으나 그 보다는 그들이 先進國이라 부르는 1926年の 스탈린刑法을 거의 그대로 模倣하였다는 데 그 主要한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⁴⁾ 北韓刑法은 蘇聯刑法을 模倣한 것이지만 그러나 細部的인 것까지 蘇聯刑法을 導入한 것은 결코 아니며, 個中에는 連坐制度和 같은 特殊한 犯罪도 있다. 이러한 北韓刑法은 北韓에 있어서는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刑法 採擇에 관하여」

1)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 1970), p. 35.

2) 姜求眞, 「北韓法の 研究」(서울: 博英社, 1975), p. 19.

3) 金現堂, 「朝鮮刑法解説」(平壤: 國立出版社, 1957), p. 43.

4) 金英一, “北韓刑法에 관한 理論의 小考,” 「統一政策」, 1979. 7, p. 133.

라고 하며 보통「共和國刑法」이라고 부르나 本稿에서는 說明의 便宜上 單純히「北韓刑法」이라 稱하기로 한다.⁵⁾

2. 立法趣旨

北韓刑法을 制定하게 된 動機 및 그 立法趣旨에 관하여는 制定當時의 그 提案理由나 이를 審議한 議事錄등이 公式의으로 發表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明白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北韓刑法의 그 立法趣旨에 관하여는 北韓刑法典과 北韓刑法을 解説한 著書 및 其他의 參考文獻 등에서 이를 摸索하게 된다. 北韓刑法 第1條는「刑法은 罪를 犯한 者에게 本法에 規定한 刑法을 適用함으로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및 그에 樹立된 法秩序를 犯罪行爲로 부터 保衛하는 것을 課業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刑法이 犯罪行爲로 부터 北韓社會의 法秩序를 保衛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는 趣旨이다. 이와 같이 北韓刑法은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法秩序를 保衛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고 하면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어떠한 行爲가 犯罪로 되는가 하는 것이 特히 問題로 된다. 이에 관하여 北韓刑法 第7條는「罪과 함은 朝鮮人民主義共和國 및 그에 樹立된 法秩序를 侵害할 社會的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一切의 可罰的 行爲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社會에서의 法秩序를 侵害할 社會的危險性이 있는 可罰的 行爲를 犯罪로 한다는 趣旨이다. 따라서 北韓刑法은 그 政治的인 宣傳理由를 除外하고 純法律的으로 檢討하면 결국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法秩序를 保衛하기 위하여 이를 侵害할 社會的危險性이 있는 行爲를 處罰하기 위함때 그 立法의 根本趣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北韓刑法의 法源과 構成內容

1. 法 源

元來 蘇聯·中共을 爲始한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法制는 傳統的으로 大陸法系에 屬하며 成文法主義를 原則으로 한다. 이러한 蘇聯刑法의 影響을 받고 制定된 北韓의 法令도 물론 成文法主義에 立脚하고 있다. 問題는 北韓刑法의 法源에 관하여 北韓에 있어서의 刑罰法令에는 어떠한 種類가 있으며 또 이러한 法令은 어떠한 機關에 의하여 制定되고 있는가 하는 点이다. 解放後 初期에는 黨 또는 蘇聯占領軍의 布告, 決定, 命令, 指示 등에 의하여 犯罪와 刑罰을 定할 수 있었으나 1948년에 北韓刑法을 採擇한 以後에는 立法權이 最高人民會議에만 專屬한다⁶⁾는

5) 廉政哲,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問題点,” 『法務諮問委員論說集』, 1978. 12, p.180.

6) 北韓舊憲法 第33條.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特色과 問題點>

原則이 確立되었고 그 後 1972년에 制定된 北韓新憲法에서도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따라서 最高人民會議가 刑事法令을 制定하는 唯一한 機關이다.⁷⁾ 그러므로 最高人民會議가 制定하는 刑事에 관한 「法令」이 北韓刑法의 法源이 됨은 疑問의 여지가 없다. 또한 最高人民會議 休會期間中에 그 權限을 代行하는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制定하는 「決定」은 後에 最高人民會議에서 承認받으면 法令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 當然히 刑法의 法源이 된다. 다음으로는 政務員의 決定으로써 새로운 刑罰權을 發生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點이다. 이에 대하여 北韓의 “심현상”은 첫째, 憲法에서 立法權은 最高人民會議에 屬한다고 하였고 둘째, 憲法上 政務員은 中央人民委員會의 下級機關에 있고 中央人民委員會는 法令이나 政令에 違背되는 下級機關의 決定, 指示 등을 廢棄할 수 있다는 點 등으로 보아서 政務員의 決定으로 犯罪과 刑罰을 定할 수 없다는 要旨을 論하고 있다.⁸⁾ 다만 最高人民會議에서 制定한 刑事法令에 의하여 委任되고 있는 白地制裁規定의 範圍內에서 政務員의 決定이 있을 때 刑事責任을 發生 시킨다고 한다. 끝으로, 戰時下의 軍事委員會 또는 刑事法令에 관한 權限이 委任된 地方軍政府의 決定은 刑法의 法源이 된다.⁹⁾

2. 構成內容

北韓의 刑法典은 第1編 總會와 第2編 各則으로 區分되고 있다. 第1編인 總會에 있어서는 第1章부터 第12章까지 63個 條文으로, 第2編인 各則에 있어서는 第13章부터 第23章까지 238個 條文으로서 形成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刑法典은 全文 2編 23章 301個의 條文으로 構成되고 있다. 이에 第1編에 있어서의 總會라 함은 總則 즉 刑法總論을 뜻하며 第2編 各則은 刑法各論을 말한다. 이러한 北韓刑法은 그 內容面에 있어서 外國의 立法例와 比較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갖고 있다.

(1) 刑法總則에다 刑事政策에 관한 一般規定을 두었고 또 刑事訴訟法에 規定하여야 할 刑事訴追의 時效 즉 公訴의 時效를 刑法總則에 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2) 刑法各論에 있어서 外國의 立法例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特異한 行爲를 犯罪로서 規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特異한 犯罪은 數 없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① 外國脫出者家族處罰罪 (第70條 第2項, 連坐刑).
- ② 民族解放運動妨害罪 (第79條).

7) 北韓新憲法 第73條.

8) 심현상, 前揭書, p. 94.

9) 上揭書, pp. 64~65.

10) 廉政哲, 前揭論文, pp. 86~88.

- ③ 犯罪豫備行爲不申告罪 (第81條).
- ④ 少年浮浪化行爲罪 (第142條).
- ⑤ 法定最高利子取得罪 (第162條).
- ⑥ 自己財物破損行爲罪 (第164條).
- ⑦ 難破船不救助罪 (第165條).
- ⑧ 就業忌避行爲罪 (第174條).
- ⑨ 生産勞動忌避行爲罪 (第197條).
- ⑩ 主權機關指令不履行罪 (第203條).
- ⑪ 結婚條件金品提供罪 (第253條).
- ⑫ 年令未達者와의 結婚罪 (第255條).

以上과 같은 行爲가 刑法上の 犯罪로 될 수 있는 가는 17, 18世紀의 警察國家·專制國家에 있어서는 몰라도 現代 國家의 刑事立法에서는 거의 그 類例를 찾아 볼 수가 없다. 現代의 法治 國家에 있어서는 이러한 行爲의 大部分은 거의 犯罪로 取扱하지 않고 있으며, 假令 그 中の 一部가 犯罪로서 規定되어 있을지라도 犯罪의 成立에 있어서는 違法行爲를 期待할 可能性이 없는 경우 즉 期待可能性이 없는 경우로서 責任阻却을 認定하는 것이 原則이다.

(3) 北韓刑法은 犯罪에 刑罰이 대단히 苛酷하다는 點이다. 刑法各論에 있어서 法定刑에다 死刑을 規定하고 있는 法條文이 50餘條에 이르고 있고 一個의 條文에는 數個의 犯罪行爲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刑法上 死刑에 處할 수 있는 犯罪의 數는 事實上 數百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法定刑에다 이론바 絕對死刑, 즉 犯人에 死刑만을 宣告하여야 하는 犯罪는 法條文만으로써도 9個條에 이르고 있다.

(4) 刑法을 制定하는 立法技術이 너무나 貧弱하고 素朴하다는 點이다. 犯罪를 分類함에 있어서 一定한 體系나 順序가 없이 아무렇게나 羅列하고 構成要件에 있어서도 害毒行爲 (第73條), 發育이 充分하지 못한 者 (第136條), 社會團體의 일꾼 (第232條) 등 너무나 曖昧하고 不確實하며 抽象的인 또는 包括的인 用語가 法條文에 散在하고 있으며 또 犯罪의 構成要件에 있어서는 그 構成要件의 內容이 他의 規則, 規律, 規定 또는 規程 등에 委任되고 白地·空白으로 되어 있는 이론바 白地刑法이 많이 散在하고 있어서 刑法에 構成要件을 設定한 그 根本趣旨를 喪失하게 될 것이다.

(5) 刑法에 있어서의 保障의 機能이 全然 考慮視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사실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全文 301條를 檢討하여 보면 우리 韓國刑法에 있어서 犯罪로 評價되지 않는 行爲가 거의 犯罪로써 規定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可恐할 刑法下에서 個人的 自由나 權利·基本的人權을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음을 물론, 또 이러한 刑法이 20世紀의 後半期에 있어서 存在할 수 있다는 그 自体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北韓刑法은 마치 獨裁者가 北

韓住民을 監視하기 위한 道具이며, 사람을 動物과 같이 訓練하기 위한 武器로서 利用되고 있다. 北韓刑法을 惡法 中の 그 惡法이라고 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點에 있다 할 것이다.¹¹⁾

Ⅳ. 北韓刑法의 基本原則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그 刑法典의 總論에 北韓刑法의 一般原則을 規定하고 있는데 第1章의 一般的 規定과 第2章의 刑事政策의 一般規定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第1章과 第2章에는 여러가지 原則이 提示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北韓刑法은 바로 이러한 原則을 基本構造로 하여 形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原則은 社會主義國家 特히 蘇聯刑法의 基本原則 이른바 強力한 階級指向的 法体制의 實現을 통한 社會主義社會의 利益保護라고 하는 基本原則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¹²⁾ 이것은 北韓刑法이 個人的 權利와 自由保障 보다는 全體의 利益保護를 重視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全體의 利益保護는 이른바 푸로레타리아 獨裁를 強化實現하기 위한 手段方法이며, 具體的으로는 北韓政權의 維持, 그리고 이를 위해서 操縱하는 北韓勞動黨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으며, 北韓에 있어서의 모든 法令과 刑罰法規는 바로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制定되며 또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刑法은 國際社會에서 通用되고 있는 刑法思潮나 刑法의 根本原則 또는 人間的 尊嚴性 등을 考慮 내지 遵守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 韓國刑法 및 自由陣營國家의 刑法과 다른 特色이 있는 北韓刑法의 重要的 基本原則을 例示하고자 한다.

1. 社會的危險性 있는 行爲

北韓刑法에 있어서 社會的危險性이 있는 行爲라 함은 이른바 北韓의 人民民主制度의 基本 또는 北韓의 法秩序에 대하여 가장 危險한 性格을 包含한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犯罪의 社會的 屬性의 實質的 表徵이라고 한다.¹³⁾ 北韓刑法이 社會的 危險性 있는 行爲를 犯罪로 規定한 理由는 北韓에 있어서 犯罪은 勤勞人民들의 利益을 侵害하며 참으로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行爲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⁴⁾

北韓刑法 第8條는「本法 各則에 規定한 要件을 形式的으로 具備하더라도 그 行爲가 明白히 輕微하고 害로운 結果가 發生하지 않기 때문에 社會的 危險性이 없는 경우에는 罪가 成立되지 않는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刑法上 個別的 行爲의 可罰性은 行爲의 社會的 危險性이라는

11) 上揭論文, p. 88.

12) 姜求真, 前揭書, p. 177.

13) 심현상, 前揭書, p. 111.

14) 심현상, “共和國刑法의 特性과 基本原則,” 「法學論文」, 第2輯(平壤: 科學院, 1955), p. 59.

犯罪의 實質的 表徵이 그 前提로 되어 있다. 따라서 同法 第8條는 이러한 表徵들이 喪失된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遂行된 行爲가 形式的으로 可罰的 行爲로서 北韓刑法이 豫見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行爲의 可罰性은 排除 된다는 趣旨의 規定이다.

2. 類推解釋의 許容

罪刑法定主義에 의하면 刑法의 解釋은 嚴格한 文理解釋에 局限되며 解釋上 疑問視 될 경우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解釋하는 것이 要請된다. 이러한 法理는 韓國刑法의 母體로 되고 있지만 北韓刑法은 近代 法治國家에 있어서의 基本原理인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을 否定하고 그 派生的 原則의 하나인 刑罰法規의 類推適用을 正面으로 받아들여 이를 刑法의 基本原則으로 삼고 있다. 北韓刑法 第9條는「犯罪行爲로서 그에 直接 該當하는 規定이 本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本法中 그 重要性和 種類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罪에 관한 條項에 準據하여 그 責任의 基礎와 犯罪 및 刑罰을 定한다」고 明示하여 刑罰法規의 類推를 明文으로 許容하고 있다.

北韓의 “심현상”은 이 類推解釋의 許容에 관하여「北韓의 刑事規範의 發展을 促進 시키는데」¹⁵⁾ 寄與하며 따라서 北韓刑法 各則·條項에서 叙述된 犯罪構成要件의 諸 表徵에 直接 該當하지 않으나 階級鬭爭形態의 變動으로 말미암아 그 行爲가 裁判所に 의하여 北韓刑法의 總則 및 各則의 內容上 社會的 危險한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에는 그 遂行行爲에 대하여 刑事責任을 져야 한다고 한다.¹⁶⁾ 그러나 北韓刑法上 犯罪란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이기 때문에 만약 이 類推의 規定을 마음대로 適用한다면 結局 아무런 刑罰法規가 없을 지라도 모든 社會的 危險行爲가 犯罪로 된다는 結論이 쉽게 導出 되므로 刑法의 이론바 保障의機能은 有名無實化 되고 말 것이다.¹⁷⁾ 北韓의 “심현상”도 이 점에 관하여 北韓刑法 第9條를 嚴格히 解釋·適用하여야 한다는 趣旨의 主張을 하고 있으나 과연 刑事實務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疑問이다.

3. 刑罰法規의 邇及의 適用의 可能性

北韓刑法 第5條는「罪를 犯한 者는 그의 行爲當時의 法令에 의하여 責任을 진다」고 規定하여 行爲時法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行爲者의 利益을 保護하려는 趣旨에서 同法 第6條는 第5條에 대한 例外로써「어떤 行爲에 대한 刑法適用을 廢止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責任을 輕하게 하는 法令은 그 法令이 施行되기 以前에 遂行한 行爲에 대하여서도 適用한다」라고 하여 刑法效力의 不邇及의 原則을 宣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러한 刑法 效力의 不邇及의 原則은 北韓刑法의 解釋上의 原則이며 立法上의 原則인 것은 아니다.¹⁸⁾ 라고 하여 立法上으로는 얼

15) 심현상, 前揭書, p. 77.

16) 심현상, 前揭論文, pp. 60~61.

17) 姜求眞, 前揭書, p. 182.

18) 심현상, 前揭書, p. 83.

마든지 例外를 認定할 수 있게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8.15 解放 前의 行爲로서 一般的으로 그 行爲의 性質이 北韓에 危險한 것이라면 그것은 犯罪로서 刑事訴追할 수 있다고 한 北韓刑法 第17條나 이른바 朝鮮民族 解放運動을 反對한 行爲에 대한 刑事訴追의 時效를 法院의 裁量에 의하게 한 北韓刑法 第60條는 이러한 意味에서 그 存在의 根據를 理解할 수 있다고 한다.¹⁹⁾ 위 刑法 第17條 및 第60條를 類推解釋制度和 더불어 잘 活用하기만 하면 적어도 이른바 「反國家的 犯罪」에 관한 限 解釋上的 原則이라고 하는 刑罰不遑及의 原則은 오히려 例外로 되고 刑罰은 原則적으로 遑及하는 結果를 招來할 危險性이 至極히 많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豫備·未遂의 既遂犯과의 同一可罰性和 教唆·幫助의 正犯과의 同一可罰性

(1) 北韓刑法에 의하면 犯罪의 豫備라 함은 機具 또는 手段을 探索하거나 取得하거나 혹은 犯罪實行에 必要한 條件을 지은 것 (同法 第19條)을 말하고, 未遂라 함은 犯罪實行에 着手하였으나 그 完遂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必要하다고 생각한 모든 行爲를 하였으나 그 結果가 發生하지 않은 것 (同法 第18條)을 말한다. 이러한 豫備 및 未遂는 既遂와 同一한 條項에 의하여 處斷한다고 北韓刑法은 規定하고 있다(同法 第20條 第1項). 그러므로 北韓刑法의 各則에서 特別히 豫備 및 未遂를 處罰한다는 規定이 없더라도 모든 犯罪의 豫備와 未遂를 處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이 刑法各本條에 特別規定이 있을 때에만 犯罪의 豫備와 未遂를 處罰할 수 있는 韓國刑法(第29條) 또는 自由陣營國家의 刑法과는 判異하게 다르다. 法文의 既遂와 同一한 條項에 의하여 處斷한다는 意味를 問題된 犯罪의 既遂를 豫想한 그 條項과 第20條 第1項에 의하여 訴追된다는 뜻으로만 解釋하고²⁰⁾ 未遂者 및 豫備者에 대한 刑罰은 未遂者 또는 豫備者의 危險性의 程度, 犯罪의 意思를 實現한 程度 및 既遂에 이르지 않은 原因을 參酌하여 定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理論上으로는 모든 故意犯의 豫備와 未遂를 既遂의 刑罰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犯罪行爲에 相應하지 아니한 刑罰의 適用이 濫用될 可能性이 많으며 既遂犯이 犯罪의 定型이나 그 基本的形態가 될 수 없고 따라서 犯罪의 發展的인 各 段階는 別 重要한 意味를 갖지 못하게 된다.

(2)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共犯에 관하여 教唆者와 幫助者를 正犯者와 同一한 條項에 의하여 處罰하고 있다(北韓刑法 第22條). 이것은 共犯者에 대한 處罰의 範圍를 擴大한 것이며 심지어는 幫助者도 正犯者 보다 重하게 處罰될 수도 있다. 이러한 北韓刑法의 共犯體系에 있어서는 犯罪의 實行에 加功·關與한 者를 모두 正犯이라 보고 그 正犯者의 行爲에 대하여 그 加功한

19) 姜求眞, 前掲書, p. 184.

20) 金현상, 前掲書, p. 191.

程度・性質에 따라서 그 刑罰을 定한다. 이것은 共犯者를 모두 統一的 包括的으로 正犯이라 본다는 点에서 刑法學에 있어서는 이를 統一的正犯者概念 또는 包括的正犯者概念 혹은 排他的正犯者概念이라고 한다.²¹⁾ 이러한 立法例의 그 典型이 바로 1926年의 이른바 스탈린刑法의 第18條이며 北韓刑法의 第22條는 共犯의 可罰性을 擴大한 스탈린刑法 第18條의 規定을 그대로 導入한 것이다.

5. 不申告의 可罰性(連坐刑).

北韓刑法에 있어서 犯罪의 不申告行爲를 대단히 重要視하고 이를 總則에 規定하고 있다. 즉 北韓刑法 第26條는 「犯罪가 遂行되었거나 또는 準備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申告하지 않는 者에 대하여는 本法에 특히 規定된 경우에 限하여 刑罰을 適用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他人의 行爲가 犯罪의 既遂・未遂는 물론 그 豫備程度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搜查機關에 申告하지 않았다는 不申告行爲에 대하여는 刑法各本條에 그 特別規定이 있을 때에 限하여 處罰한다는 趣旨이다. 이러한 不申告行爲를 특히 刑法總則에다 規定한 것은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他人의 모든 犯罪를 搜查機關에 申告하는 것이 義務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않고 申告하지 않았다는 不作爲를 犯罪로써 取扱한다는 趣旨가 內包되고 있다. 이것은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惡法인 連坐刑制度를 刑法에 導入하는 것이며 또한 近代 刑法에 있어서의 自己責任・個人責任의 原則에 反함은 두 말할 必要가 없으며 實로 可恐할 立法例가 아닐 수 없다.

6. 國家政治制度 및 經濟的 利益에 대한 지나친 保護.

北韓刑法은 다른 種類의 犯罪에 比하여 國家主權敬對・國家管理 및 國家所有 侵害에 관한 罪 公務員犯罪 및 經濟的 犯罪에 관하여 매우 包括的인 規定을 둘 뿐만 아니라 보다 더 重한 刑罰로서 다루고 있는 点 및 刑法典 全体系 안에서 이 種類의 犯罪들이 차지하는 位置나 그 犯罪들을 表象하기 위하여 使用된 用語들에 비추어 볼 때에 北韓刑法은 그 무엇보다도 國家의 政治制度 및 經濟的 利益의 保護에 最高의 優先順位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刑法의 課業(北韓刑法 第1條)이나 北韓法院의 課業(裁判所構成法 第3條 參照) 중 北韓에 確立된 人民民主主義 國家制度의 保護가 그 첫째 目的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刑法各則 第20章「經濟에 관한 罪」의 章을 보면 國家가 計劃經濟의 主体로서, 또한 經濟發展의 推進者로서의 役割은 圓滑히 할 수 있도록 犯罪의 內容을 規定하고 그 法文의 內容도 그러한 方向에서 規定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1) 廉政哲, 「刑法總論」(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1970), p. 328.

V.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犯罪論.

1. 北韓刑法典에 있어서의 犯罪論의 內容.

(1) 犯罪論에 있어서의 規定內容.

北韓刑法에 관하여 특히 注意해야 할 것은 그 犯罪論體系의 構成에 관하여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北韓刑法의 總則에 있어서 犯罪의 成否에 관하여 어떠한 內容을 規定하고 또 이를 어떠한 順序로서 配列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問題로 된다. 이것은 北韓刑法의 그 性格을 研究함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北韓刑法典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否에 관한 犯罪論을 第1章부터 第4章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 規定의 項目을 逐條別로 列舉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第1章 一般的 規定

第1條 刑法의 目的・課業.

第2條 屬人主義의 原則.

第3條 屬地主義의 原則.

第4條 外國人の 國外犯.

第5條 行爲時主義의 原則.

第6條 輕한 新法의 遡及.

第2章 刑事政策의 一般規定.

第7條 犯罪의 意義.

第8條 犯罪의 不成立.

第9條 類推解釋의 許容.

第10條 犯罪에 대한 刑의 適用.

第11條 故意와 過失의 意義.

第12條 心神障礙者의 醫療處分.

第13條 刑事成年者.

第14條 未成年者의 矯正處分.

第15條 正當防衛.

第16條 緊急避難.

第17條 日帝時에서의 犯行에 대한 遡及適用.

第3章 豫備의 未遂.

第18條 未遂의 意義.

第19條 豫備의 意義.

第20條 豫備 未遂의 既遂犯과의 同一可罰性.

第21條 中止未遂.

第4章 共 犯.

第22條 教唆者・幫助者의 正犯과 同一可罰性.

第23條 正犯者・教唆者・幫助者의 意義.

第24條 犯人隱匿行爲의 例外處罰.

第25條 正犯者・教唆者・從犯者에 대한 量刑.

第26條 不申告行爲의 例外處罰.

以上이 北韓刑法典에 있어서 犯罪의 成否에 關하여 規定하는 項目의 그 內容이다. 그리고 北韓刑法典에 있어서는 法條文의 그 모든 用語를 한글로 表現하고 있다.²²⁾

(2) 犯罪論에 있어서의 規定內容의 問題點.

元來 刑法總則에 있어서의 犯罪論은 刑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基本的이라 할 수 있는 犯罪의 成立과 不成立에 關한 問題를 規定한다. 이러한 犯罪의 成立 不成立은 恣意로 決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歷史的으로 違法性 責任性이라는 이른바 犯罪의 要件을 前提로 한 一定한 法理論이 있다. 거기서 犯罪의 成否에 關한 犯罪論을 定立함에 있어서는 各國의 改正運動이나 立法傾向, 立法例 등을 參考로 하게 되며 따라서 그 內容은 대체로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刑法典에 있어서는 이러한 立法例와는 다른 여러가지 特殊한 問題點을 갖고 있다.

①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刑法의 目的 또는 犯罪의 意義를 그들의 體制와 結付시켜 定義하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刑法 第1條에서는 保衛 또는 課業이라는 特殊한 用語를 使用하고 있을 뿐이며 또 第7條에서는 社會的危險性이라는 特異한 概念을 導入하고 또 無過失行爲를 犯罪로 하지 않는다는 當然한 原則을 明示하였을 뿐이며 그 以外에는 法文 그 自体에 아무런 別다른 意味가 內包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純 法理論이 導入되어야 할 刑法의 目的이나 犯罪의 意義에다 北韓의 政治的體制를 明示하고 있다는 점에 外國의 立法例와 다른 特色을 갖고 있다.

②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 그 自体가 不確定하다는 점이다. 北韓刑法 第7條 第8條 第11條 第12條 등에서의 社會的危險性을 犯罪 즉 故意와 過失을 認定하는 그 基準이며 또 要件이라고 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意義를 갖게 된다. 이에 關하여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이를 行爲의 社會的危險性 또는 行爲者의 社會的危險性 혹은 法秩序를 侵害하는 社會的危險性 등 多樣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그 社會的危險性의 存否를 判斷하는 主体는 法院이므로 法官에 의하여 判斷되며 搜查段階에 있어서는 搜查機關員에 의하여 判斷된다. 그리고 社會的危

22) 廉政哲, 前掲論文, p. 99.

險性이라는 概念은 그 自体가 뜻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可能性과 같은 未完成을 包含한 危險性이며 模糊한 抽象的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曖昧하고 不確定한 社會的危險性이라는 概念으로서 犯罪의 成立與否를 決定한다고 하면 刑事裁判의 實際에 있어서는 거의가 法官의 恣意에 의하여 有·無罪가 決定될 것이 문제로 된다.

③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과 不成立에 관하여 문제로 되는 그 重要한 部分의 法文規定이 缺如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北韓刑法의 總則에 있어서는 우리 韓國에 있어서와 같이 襲擊者, 強要된 行爲, 因果關係, 不作爲犯, 獨立行爲의 競合, 正當行爲, 自救行爲, 被害者의 承諾 등은 물론 其他 事實의 錯誤, 法律의 錯誤 등에 관한 規定이 全然 없다.²³⁾ 거기서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이러한 問題에 관한 解決은 결국 理論이나 法實務에 委託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解決함에 있어서도 第7條에서 「法律秩序를 侵害할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行爲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解決의 指針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刑法에 있어서 上記와 같은 諸規定을 法條文에다 두지 않고 이를 第7條의 漠然한 社會的危險性의 存否에 따라서 解決한다는데 다른 立法例와 별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④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刑法上の 모든 犯罪에 대하여 그 過失을 處罰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그 總則에 있어서 우리 韓國刑法에서와 같이 故意行爲만을 原則으로 處罰하고 따라서 過失行爲를 刑法各本條에서 이를 특히 處罰한다는 特別規定이 있을 경우에 限하여 비로소 處罰한다는 그 特別規定이 없다. 다만 北韓刑法의 總則에 있어서는 犯人隱匿行爲(第42條)와 犯罪의 不申告行爲(第26條)에 대하여 이를 處罰한다는 特別規定이 있을 경우에 限하여 處罰한다는 要旨을 規定하고 있을 뿐이다.²⁴⁾ 그러면 이러한 過失에 대한 刑罰을 어떻게 定할 것인가는 北韓刑法의 趣旨로 보아서 故意犯의 法定刑의 範圍內에서 法院은 第46條의 「그 犯罪가 얼마만큼 社會的으로 危險한 것인가를 考慮하여야 한다」는 規定을 基準으로 하여 刑을 量定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過失을 故意와 同一視하고 모든 犯罪에 대하여 過失을 處罰한다는데 다른 立法例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⑤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其他 類推解釋을 許容하고 있다는 점 (第9條) 그리고 豫備와 未遂를 既遂犯과 同一한 刑罰로서 處罰하고 (第20條), 또 教唆者와 幫助者를 正犯者와 同一한 刑罰으로서 處罰하고 있다는 점 (第22條) 등도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特色이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前述의 北韓刑法의 基本原則 分野에서 說明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23) 上揭論文, p. 101.

24) 上揭論文, p. 102.

2. 犯罪의 意義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第7條에서 犯罪의 意義를 定義하고 있다. 즉 第7條는 「罪라 함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및 그에 樹立된 法秩序를 侵害할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一切의 可罰的 行爲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第8條에서는 「本法各則에 規定한 要件을 形式的으로 具備하더라도 그 行爲가 明白히 輕微하고 害로운 結果가 發生하지 않았기 때문에 社會的 危險性이 없는 경우에는 罪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明示하고 있다. 이것은 第7條에 있어서는 犯罪을 가리키며 法秩序를 侵害할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行爲라고 定義한 것이고 第8條에서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行爲라 할지라도 그것이 輕微하여 社會的 危險性이 없을 때에는 犯罪가 成立되지 않는다는 趣旨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一定한 行爲가 犯罪로 되는가 않는가는 결국 그 行爲가 法秩序를 侵害할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가의 與否에 따라서 決定되며 故意나 過失은 중요한 意味를 갖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社會的 危險性이 없는 行爲는 假令 그 行爲者에 故意 또는 過失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犯罪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法刑에서는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行爲가 바로 犯罪로 되며 이는 너무나 素朴하고 形式的이라는 批評을 免할 수가 없게 된다.²⁵⁾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犯罪의 意義에 관하여 特히 문제로 되는 것은 北韓刑法 第7條는 實質的·形式的 意義中 어느 犯罪을 定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北韓刑法의 第7條는 그것이 刑法典自体에서 定義한 것이며 또 犯罪을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行爲라는 이른바 刑法上的 概念으로서 定義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實質的意義에 있어서는 犯罪을 定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결국 形式的意義에 있어서는 犯罪을 定義한 것이라고 理解하여야 한다.²⁶⁾ 이와 같이 北韓刑法의 第7條는 形式的 意義에 있어서는 犯罪을 定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第7條의 定義 그 自体가 犯罪의 意義이며 要件이 되므로 그 以外에 따로 犯罪의 意義나 要件을 論하거나 分析할 實益이 없게 될 것이다.

3. 犯罪의 要件에 관한 特異性

現代 法治國家의 刑法學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에 一定한 要件을 必要로 한다. 이른바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 責任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보통 犯罪의 要件 또는 犯罪의 成立要件이라고 稱한다. 따라서 犯罪의 成立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세가지 要件을 具備하여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具備치 못하면 刑法上的 犯罪은 成立되지 아니한다. 刑法學의 犯罪論에 있어서는 이러한 犯罪의 要件이 무엇인가를 分析하고 究明하는 것을 그 主要한 課題로 삼는다. 이것

25) 上揭論文, p. 104.

26) 上揭論文, p. 104; 金英一, 前揭論文, p. 145.

이 Beling 以後의 刑法學에 있어서의 傳統的인 犯罪論이다. 그러면 北韓刑法에 있어서도 犯罪의 成立에 있어서 이러한 要件을 必要로 하는가, 그러나 結論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犯罪의 成立은 傳統的인 刑法學에 있어서의 것과는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要件의 그 一要素로서의 構成要件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않는다. 北韓의 “심현상” 그의 朝鮮刑法의 解説에 있어서 構成要件 또는 犯罪構成要件이라는 用語를 쓰고는 있다.²⁷⁾ 그러나 그것은 犯罪의 成立要件의 그 一要素로서의 構成要件이 아니고 「本法各則에 規定한 要件」(第8條), 즉 刑法各則의 各本條에 있어서 個個의 犯罪가 成立하기 위한 要件(特別構成要件)이라는 뜻으로 使用하고 있다. 또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要件의 그 要素로서의 違法性·責任性이라는 概念이 없고 따라서 우리 韓國이나 外國의 刑法總論의 犯罪論에서와 같은 犯罪의 成立要件이라는 概念이 없으며 「犯罪은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違法·有責한 行爲이다」라는 定義가 存在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北韓刑法의 犯罪論에 있어서 犯罪의 成立要件이 없다고 하면 北韓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은 어떻게 定義하며 또 說明하고 있는가. 이에 관하여 北韓의 “심현상”은 그의 刑法解説書에서 「犯罪構成要件은 共和國刑法의 見地에서 一定한 行爲를 犯罪로서 特徵 짓는 客觀的 및 主觀的 表徵들의 總體이다」라고 論하며 또 이러한 表現을 여러 곳에서 되풀이 強調하고 있다.²⁸⁾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하여 반드시 明白치는 않으나 대체로 犯罪은 刑法各本條의 構成要件에 定한 여러 要素의 總體라는 뜻으로 理解되며 犯罪의 成立은 결국 그 行爲가 構成要件에 該當하는가 않는가 하는 與否에 따라서 決定하게 된다. 이와 같이 犯罪은 構成要件該當性이라는 그 評價 하나만으로써 決定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른바 構成要件該當性의 一本論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犯罪의 成立은 傳統的인 刑法學의 犯罪論에 있어서는 찾아 볼 수 없는 特異性이며 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4. 構成要件의 要素

犯罪의 成立에 있어서 그 唯一한 要素라고 할 수 있는 構成要件은 어떠한 要素에 의하여 形成되고 있는가, 이에 관하여 北韓의 “심현상”은 「刑法各則에서 規定된 基本的 犯罪構成要件의 概念에는 소위 具體的인 犯罪에만 特殊한 客體, 客觀的側面, 主體 및 主觀的側面이 包含되어 있다고」論한다.²⁹⁾ 이것은 刑法各本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構成要件은 上記의 四要素에 의하여 形成되고 있다는 趣旨이다. 따라서 이러한 四個의 要素는 어디까지나 構成要件을 形成하는 要素이지 犯罪의 成立要件이 될 수 없다. 이러한 構成要件의 要素의 分類는 蘇聯의 刑法學에 있어

27) 심현상, 前掲書, p. 110.

28) 上掲書, p. 108.

29) 上掲書, p. 114.

서의 犯罪論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³⁰⁾ 問題는 이러한 四개의 構成要件의 要素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北韓의 “심현상”은 政治的·非法律的인 用語를 使用하며 여러가지로 複雜하게 說明하고 있으나 그 要旨을 檢討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客体라 함은 犯罪의 客体를 말하고 이러한 客体는 刑事法令에 의하여 保護되고 있는 法律秩序 또는 人民民主主義的인 社會關係라고 論한다.³¹⁾

(2) 客觀的側面, 이는 犯罪의 客觀的 側面을 말하며 이것은 社會的으로 危險行爲를 特徵 지워 주는 客觀的屬性을 뜻하는 것이라 論한다.³²⁾ 그리고 이러한 犯罪의 客觀的側面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犯罪的行爲, 犯罪的結果, 因果關係 등을 檢討하여야 한다고 論한다.³³⁾

(3) 犯罪의 主体는, 責任能力이 있는 自然人이어야 하므로 法人은 犯罪의 主体가 될 수 없고 따라서 刑事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4) 主觀的側面, 이는 行爲者의 主觀的인 側面을 말하며 犯罪의 形態 즉 故意 또는 過失이 條件이 되는 것이라 論한다.³⁴⁾ 以上과 같은 四個의 構成要件의 要素中에서 그 客体와 客觀的 側面은 그것이 犯罪의 客觀的 要素에 屬하는 것이며 또 그 主体와 主觀的 側面은 犯罪의 主觀的 要素에 屬하는 것이다. 따라서 構成要件의 要素는 결국 行爲의 客觀的 要素와 行爲者의 主觀的 要素의 그 모든 것을 包含하게 된다. 그리고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이러한 要素는 刑法各本條의 構成要件에 當然히 包含되고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Ⅵ. 結 語

以上과 같이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特色 및 問題點들을 部分別로 指摘하였는바, 北韓刑法은 個人의 自由와 福利增進에 優先順位를 주는 自由主義刑法에 比하여 너무나도 經濟指向의이고, 唯一思想을 前提로 한 獨裁主義 政治形態를 構築하여 政治的인 用語를 지나치게 濫用하고 있고, 特定한 概念에 대하여 이를 理論的으로 分析하지 아니하고 抽象的인 文句로써 斷言命令的인 獨斷에 빠져 있으며, 全體의 利益保護라는 美名下에 個人의 權利와 自由의 保障이 全然 考慮視 되지 않고 있다. 또 刑法體系의 水準이 至極히 非論理的이고 落後되어 刑法自体로서의 價值조차 疑心스럽다고 하겠다. 이러한 北韓刑法에 관하여 특히 問題가 되고 있는 몇가지 點을 整理하여 보기로 한다.

30) 中山研一, 「社會主義國家의 刑法」(東京: 有斐閣, 1972), p. 14.

31) 심현상, 前揭書, p. 116.

32) 上揭書, p. 122.

33) 上揭書, pp. 122~138.

34) 上揭書, pp. 148~159.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그 特色과 問題點>

첫째,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近代法의 基本原理인 「法律 없으면 犯罪도 없다」는 罪刑法定主義를 拒否하고 있다. 元來 罪刑法定主義에 있어서는 그 派生的原則의 하나인 類推解釋의 禁止를 要求하나 만일 이를 許容하면 法律에 明示되지 아니한 行爲가 犯罪로 되며 따라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에도 反하게 된다. 罪刑法定主義에 立脚한 近代的 自由主義 刑法에 있어서는 刑法이 國家 즉 裁判官의 恣意的인 刑罰權 行使를 抑制하여 個人의 權利·自由를 保障하려는 刑法의 Magna Carta의 機能인 保障의 機能이 特히 強調되고 있는데³⁵⁾ 反해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犯罪란 社會의 危險性이 있는 行爲이기 때문에 이 類推의 規定을 濫用하게 되면 결국 아무런 刑罰法規가 없다고 하여도 社會의 危險性 있는 行爲가 곧 犯罪가 되므로 刑法의 保障의 機能은 有名無實하게 되고 따라서 人權의 保障이 全然 考慮視 되지 않으며, 犯罪의 定型이 없고 犯罪의 意義와 成立이 曖昧하고 不確定하게 된다.

둘째, 違法性 阻却事由로서의 正當防衛 및 緊急避難에 관한 規定에 過剩防衛, 誤想防衛 및 過剩避難, 誤想避難에 관하여 直接的 規定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 點도 北韓刑法이 犯罪定型性에 未洽하기 이룰데 없다.

셋째, 우리 韓國刑法에서 規定되어 있는 聾啞者, 強要된 行爲, 因果關係, 不作爲犯, 獨立行爲의 競合, 正當行爲, 自救行爲, 被害者の 承諾, 法律의 錯誤, 事實의 錯誤, 등에 관한 規定이 全然 없는데 위의 모든 문제의 解決을 北韓刑法 第7條의 漠然한 社會의 危險性의 存否에 따라 決定한다는 것은 恣意와 獨斷으로 人權을 蹂躪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넷째, 近代 刑法의 思潮가 自己責任, 個人責任의 原則을 基本으로 하는 것과 逆行하는 犯罪의 不申告行爲(連坐刑)에 대한 北韓刑法에 있어서의 不作爲犯 取扱은 刑政思想에 反하는 實로 可惡할 立法例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北韓刑法에서는 豫備와 未遂를 既遂犯과 同一한 法定刑으로, 共犯에 관하여 教唆者와 幫助者를 正犯者와 同一하게 處罰하고, 또 刑法上の 모든 犯罪에 대하여 過失을 故意와 同一하게 處罰하고 있는데 이것은 犯罪行爲에 相應하지 아니한 刑罰의 適用이 濫用되게 하여 苛酷한 處罰을 받게 하는 不合理한 立法인 것이다.

上記와 같이 未洽하고 不合理한 刑法을 가진 北韓은 國際社會에 있어서 韓民族으로서의 그 威信과 體面을 위하여, 또 北韓住民의 自由와 人權保障을 위하여서도 하루 속히 現行 刑法을 改正하여야 할 것이며, 또 아무리 北韓刑法이 近代 法治國家의 刑法學의 見地에서 學術的으로 沒價值的이고 形式論理的이라고 하더라도 實際로 30餘年 동안이나 北韓의 無辜한 우리 同胞를 支配하여 왔기 때문에 그들대로 이 刑法理念을 올바른 것으로 生活할 수 밖에 없는 特有의 「法律文化」가 形成될 것이기에 統一 後 새로운 法の 制定을 위해서도 北韓刑法에 관한 꾸준한 分析과 對備는 緊要한 일이라 하겠다.

35) 鄭榮錫, 「刑法總論」(서울: 法文社, 1980), p. 19.